

오리농법등 환경농업농 직접지불제 시행

ha당 52만4천원 지원

올해부터 오리농법등 유기농법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어 ha당 52만4천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같은 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올해 1단계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팔당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며 내년엔 환경 규제지역외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2억3천7백37만원, 특별대책지역 20억 6백39만원, 자연공원지역 52만4천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상자는 환경규제지역내 1,000m² 약3백평 이상의 면적에서 농촌진 흥청이 마련한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실천하고 유기합성농약 살포횟수를 농약관리법 안전사용기준의 절반이하로 줄여 삭용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다. 그러나 축산물, 임산물, 화훼류 재배농가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나 생산자조직은 도 농산유통과나 시군의 농업관 련 부서 국립농산물검사소 시군출장소, 농협 시군시부에 신청하면된다.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조사차 방중 수의과학검역원 3월14일부터

중국의 가금육 수입재개 여부의 관건이 될 질병실무팀이 오는 14일부터 2주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이 요구해온 중국산 가금 육 수입재개와 관련해 중국정부와 협의하에 오는 14일부터 2주일정으로 중국의 가금인플루엔자 질병발생에 대한 우리당국의 실무자가 방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번 중국의 방문은 지난해 김대통령의 방중시 중국당국이 무역역조 개선을 요구하며 그 하나로 지난97년 12월30일 수입이 중지된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관계자를 파견 해 조치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중국방문과 관련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우리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오리사육농가 보호차원에서 일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무역 역조 개선요구가 워낙커 어쩔수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전제하고 이번 중국방문시 중국의 강독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여부와 질병 방제시스템에 대 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중국내 오리고기 수출상황에 대한 98년도 자료를 요청했으나 담당직원은 중국정부관계자와 식사를 하면서까지 이자료를 요청했으나 중국정부가 공개하지 않아 자료수집이 안되고 있어

죄송하다는 밝혔다.

봄철 오리사육장 화재 다발 예방에 철저기해야

봄철들어 오리사육농가의 사육장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다발하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부북부지회 하늘네 농장은 지난달 27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건물8동 축사가 모두전소되고 큰오리 2천수가 불에타는 피해를 입어 약 6-7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경기 화성의 한 오리사육농가도 지난 3일 전기누전에 의해 사육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같이 오리사육농가 사육장에서 화재가 다발하고 있는 것은 축사들이 노후한데다 건조한 날씨로 조그만 스파크가 있으면 불이날 수 있는 취약한 여건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사육농가들은 축사가 노후화됐다 하더라도 전기점검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축사내부 청소를 철저히하여 화재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요망된다.

귀농자 영농자금 2백억 지원

농림부는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창업자금 2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지원대상자는 98년 1월1일이후 농촌으로 주소를 옮긴 자중 농지구입등 영농기반을 확보한 자이며 영농정착여부는 귀농지역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확인받았거나 영농기술교육을 이수 농과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55세이하의 귀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귀농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축협 2001년까지 통폐합 축협

농축협등 4개협동조합이 오는 2001년까지 통폐합되고 중앙회 기능이 일선 지역조합으로 대폭이양된다. 또 정부자금과 중앙회 자금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적극육성되고 상호금융,지도 교육사업을 보강하여 농업인을 위한 종합농협으로 육성된다.

농림부는 지난 8일 농축협 일선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를 확정 발표했다.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중앙회는 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 등 4개 중앙회의 기능을 통폐합하며 올 상반기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연합회로,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중앙회로 통합되며 농축협중앙회는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하여 2001년까지 통합된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을 갖도록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 독립 전문책임경영체계로 개편된다.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조합장 직선제에서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의한 간선제로 개편된다.

일선조합 개혁은 농축협의 일선조합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집중지원육성되며 기존의 상호금융도 보강하여 종합 농협으로 육성된다. 또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합은 신용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선농협은 현재 1,203개소를 1군1조합을 원칙으로 최단기간내에 300개소로 통폐합하고 40개의 도농복합시는 경제권에 따라 2-3개로 통합된다.

축협의 일선조합은 지역별로 축산업 분포상황에 따라 광역화하여 전문업종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202개소에서 최단기간내에 100개소 이내로 통합되며 축협중앙회의 10개 도지회는 년내에 폐쇄하여 건물매각대금등은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 자금으로 투입된다.

또 중앙회와 회원축협간에 경합되는 사업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거나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공동출자 공동경영방식으로 개편되며 공동출자회사의 경영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유도하며 중앙회는 동사업체의 경영지도만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협동조합개혁방안중 관련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실시하고 관련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안내

본회는 오리업의 전전한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코자 결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본회 가입은 오리업 종사자면 자유의사에 따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절차는 본회가 발행하는 가입신청서와 가입비를 내면되며 연회비는 사육농가 12만원, 유통업자 30만원, 부화업자 60만원등입니다.

본회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오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수 있는 동시에 각종 불이익 발생시 협회가 나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업계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본회납입구좌: 농협 123-01-089430 예금주 한국오리협회